

정호용 드디어 입여나...5·18 발포 책임자 밝혀질지 주목

(5·18 당시 특전사령관)

5·18진상조사위에 낸 진정서 보니

5·18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소장)이던 정호용(89)씨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5·18 가해 책임자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에는 특전사 작전 참모로 있던 장세동씨의 광주 출동, 5·18과 전두환 집권 시나리오와의 관련성 등이 언급되면서 향후 미완의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광주일보가 확인한 정씨의 진정서는 모두 2번에 걸쳐(2월·3월) 총 2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정씨는 특전사령관을 맡았어도 실질적 작전 지휘권이 없었는데, '5·18 가해책임자'로 지목됐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전두환을 비롯한 5공 실세인 허화평·허삼수·허문도·장세동과 불화·갈등 관계로 광주 진압 작전에 배제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는 ▲5차례의 헬기 출동은 진압 작전과 무관한 인사·군수 지원 업무 수행 ▲장세동 등 5공 실세와의 갈등 관계로 광주 진압 작전의 주동자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진정서에 담았다.

특히 '5월 10일께 당시 특전사 작전 참모직을 맡고 있는 장세동 외 5인(박종환 특전사 작전과장을 포함해 하사관 등 5명)이 광주에 출동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정서에 적시돼 '전두환의 분신'으로



“허화평 등 ‘쓰리 허’와 불화로 광주 진압작전 배제” 강변 ‘전두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인정 내용도 포함
신군부 행적 등 5·18 진상 규명 도움 될지 초미의 관심
“5차례 광주 방문 작전지휘 아닌 인사·군수 지원 업무” 주장
도청 진압작전 후 장형태 지사와 인사...증언 신빙성 의심도

알려진 장세동씨의 광주 행적 파악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진정서에는 '전두환의 집권시나리오'와 5·18 도청 진압 작전과의 관계도 언급됐다. 그는 진정서에서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1980년 2월 정당창당, 4월 언론통폐합 관련 브리핑, 5월 17일 계엄확대,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립이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1980년 2월 전두환이 '우리 참모들이 정당 창당을 하려는데 어디서 자금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해, 180억원 모금이 가능해졌다고 당시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인 허화평 대령에게 알려줬다는 내용, 같은 해 4월 당시 중앙정보부 비서실장인 허문도가 '언론통폐합법'을 브리핑한 데 따라 자신이 보안 지사한 주장 등도 진정서에 담겼다.

허삼수가 지난 1980년 4월 23일 도청 탈환 작전을 27일에서 3-4일 앞당기는 것이 어떤지 물어왔다는 내용도 진정서에 들어있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1980년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립이 결정돼 있는 만큼 그 전에 광주 상황을 빨리 마무리짓기 위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씨가 진정서에 5번의 광주방문상황 중 마지막인 26일 밤 9시에 광주에 도착해 작전 개시(27일 새벽 4시) 전인 5시간만 광주에 머물렀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정씨가 1980년 5월 27일 장형태 전남지사와 인사하는 영상과 비교해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송선대 5·18진상조사위원장은 "정호용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만 진상 규명에 중요한 사항이라 조심해 다가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이 수집한 영상에는 1980년 5월 27일께 전남도청을 찾은 정호용 특전사령관에게 장형태 전남지사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보관되어 있다. 검은 베레모를 쓴 정사령관은 과거 국회 청문회, 검찰조사 등에서부터 '부대를 현지 지휘관에게 배속시킨 탓에 나는 지휘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반성 없는 여수산단 대기업체들

미세먼지 오염물질 수치 조작해 놓고 시민사회 재발 방지 권고안 거부

시민대책위, 수용 촉구 집회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오염물질 수치를 조작하는 등 불법 행위로 지탄을 받았던 여수산단 내 국내 굴지의 대기업체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 시민사회가 제안한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시민사회단체 등은 대기업체들의 권고안 수용 거부를 지역민들의 환경·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연일 집회를 열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등은 집회·대기업 분사 항의 방문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11일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여수산단 내 대기업체들은 거버넌스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고 환경개선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LG화학, 한화솔루션,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 대기업체들은 지난 2019년 4월,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조작해 배출권 혐의로 적발됐었다.

지역사회의 재발방지 요구가 잇따르면서 전남도를 중심으로 산단 내 5개 마을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전남도·여수시·환경부), 도·시·의원, 여수상의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가 꾸려졌고 최근 지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한 환경관리대책 마련에 필요한 9개 방안을 마련, 해당 기업들에게 제시했다. 대기업체들은 그러나 거버넌스의 '여수산단 환경관리종합대책에 필요한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고안은 여수산단 환경오염 실태조사, 주민 건강 역학조사, 위반업체 민관 합동조사 등이 핵심이지만 일부 안전의 경우 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비용, 보안

문제 등도 우려한다는 점을 들어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기업들 입장이다.

대책위는 "환경개선과 사회적 책임 실천은 50년간 환경피해를 받은 여수시민의 정당한 요구로, 기업들은 환경문제 해결과 사회적책임 실천을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들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여수산단협의회 관계자는 "잘못은 통감하고 있지만 거버넌스에는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아 기업들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53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 역학조사 비용, 여수 전체 면적의 80%에 해당하는 환경오염 실태조사 범위(산단 주변 10km), 민·관 합동조사와 기업 현장 일반인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1·2번 권고안의 경우 사고 위험성, 보안시설의 외부 유출 우려 등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기업들이 수용 불가 입장만 강조하면서 자칫 환경 대책 장기 부재로 주민들만 피해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집회 제지 공무원 차로 들이받은 광주시농민회 간부 집행유예

농민수당 도입 촉구 집회를 위해 광주시청 앞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려다 제지하는 공무원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농민회 간부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심재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부과됐다.

광주시농민회 부회장인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차량을 광주시청 행정동 앞으로 이동시키려다 '시위장소가 아니다'며 제지하는 광주시청 사방호·경비 담당 공무원 2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일 광주시의회 앞 인도에서 열기로 했던 '농민수당 도입 촉구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짐을 옮기기 위해 시청 행정동 앞 광장으로 진입하려다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무단횡단 노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30대 운전자가 자신의 화물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80대 노인을 들이받았다. 노인은 해당 사고로 다습날 숨졌다. 30대 운전자는 사법·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항변했다. 운전자에게 죄를 물어야 할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25일 새벽, 목포시 산정동 3차로 도로를 지나다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B(8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일출 전 어두운 도로를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예견, 대비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발생 10초 전 우회전해 해당 도로에 진입했고 제한속도(60km)에 못 미치는 속도(37.4~39.7km)로 운전한 점, 당시 횡단보도

는 사고 발생 1분 전부터 보행자신호가 아닌, 차량 진행신호가 켜져 있었던 점, 사고 발생 시각은 해 뜨기 전으로 상당히 어두웠던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1분 전까지 버스 등 차량이 지나갔던 점과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주변을 살펴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반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h3>상가매매 (상무지구)</h3> <p>감정가(시세) 9억원 →매매가 5억3천만원 →보증금 3천만원, 월 250만원 (용 3억6천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상업지구 메가박스 영화관 앞 ☑ 사무실, 바, 유흥룸, 모든 업종 가능 ☑ 즉시 업무 가능, 시비 없음 <p>010-6670-9800</p>	<h3>신축원룸(매매)</h3> <p>월 수익 750만원 연 수익 9천만원 →매매가 13억원 (용 6억5천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실 없음, 임차인 항시 대기 (관리 회사에서 해드림) ☑ 당진시 석문산업단지, 화력발전소 부근 대산향 10분 소요 <p>010-4667-9820</p>
--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칼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